

행 정 법 (7 급)

(과목코드 : 129)

2026년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명 :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서 제1호 적합성, 제2호 필요성, 제3호 상당성이라는 내용상 원칙들은 강학상 단계적 관계를 가진다.
- ② 행정청이 단순한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서울지방병무청 총무과 민원팀장이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측의 상담에 응하여 민원봉사차원에서 안내한 사항은 신뢰보호원칙상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 인상률을 종전의 해당 현역군인의 보수월액의 인상률에 맞추도록 한 것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개정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2. 「행정기본법」상 법령 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다음날을 시행일로 한다.
- ②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평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하나인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그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이 가능함을 전제로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령상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나 그 추천에 의한 전문가 참여 없이 의결이 이루어진 이후 그에 기초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이다.
- ④ 행정법령상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시정명령 자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므로 형사법원은 그 위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 ③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시행령 등 법규명령의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 ④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에서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신분이 변경된 사람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에 관한 시행령 및 다른 하위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이뤄진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5. 행정작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 ②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주민은 그러한 이해관계만으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그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 ③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는 없다.
- ②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 ③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룰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④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7.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행정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법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 ④ 인허가의제로 인하여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하여야 한다.

8. 부관부 행정행위(처분)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한 종된 의사표시로서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행정행위에 붙여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기한부 허가를 규정한 법률이 유효기간 연장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허가의 효력은 소멸하게 되나, 동일한 민원인이 다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허가로서의 효력이 계속된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9.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확약을 한 후에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성질상 행정청은 그 확약에 기속된다.
- ③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④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 ③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④ 기관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리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11.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조사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ㄴ.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ㄷ.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ㄹ.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ㅁ.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ㅂ.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ㄹ
- ③ ㄴ, ㄹ, ㅁ
- ④ ㄴ, ㄹ, ㅂ

12.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재량처분인 영업정지처분 중 정지기간의 일부취소를 그 가분성을 인정하여 행할 수 있다.
- ②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사정판결의 경우 소송대상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을 종결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위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기준은 행정심판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13. 행정강제 및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의 위법한 상경 제지조치에 대해 경찰의 진압방패와 장비를 빼앗고 폭행행위를 한 경우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일정한 과세처분이 있는 후 그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채납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③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된 경우 그러한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나 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이다.
- ④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14.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만이 아니라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도 포함한다.
- ② 공무원 개인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③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의 책임 범위 내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자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국가배상법」 제3조의 배상기준은 배상의 범위를 명백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배상액의 상한을 규정한 제한규정이다.

15.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가 취해야 할 소송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권한청의 적법한 철거명령
→ 철거명령에 대한 A의 의무불이행 → 「행정대집행법」상 절차에 반하는 권한청의 행정대집행 →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 종료

- ①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절차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영장 등에 대한 취소소송(하자의 승계를 포함)
- ② 불법철거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 ③ 불법철거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 ④ 불법철거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

16.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②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 ③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으나,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④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1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및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외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심리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신청된 처분의 신청시를 기준으로 그 위법함을 판단하여야 한다.

18. 다음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갑은 집수정을 설치하고 수로관을 매설하여 유수를 점용하였다. 관할 행정청 을은 갑이 법령에 따른 점용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갑을 고발하였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형사법원에 기소하였다.

- ① 을이 갑에게 유수점용허가를 내리는 경우, 유수점용허가는 수익적 처분이다.
- ② 을이 갑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 시정명령은 침익적 처분이다.
- ③ 형사법원은 을의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④ 을이 갑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9.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무사규칙을 근거로 지방법무사회가 사무직원 채용을 승인취소하는 조치는 행정처분이며, 이 대상인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직원 채용승인은 동 회의 고유사무이다.
- ② 대한주택공사 관계법령상 동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민간사업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 ③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 ④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한 서면경고는 행정처분이 되지 아니한다.

20.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의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그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피고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이 된다.
- ② 권한의 대리에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로 되어야 한다.
- ③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가 아닌 보조참가 시 참가인이 상소를 한 경우 피참가인은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 ④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아닌 원고를 피고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1.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통근차량이 없는 부대에 소속한 군무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영외의 숙소로 곧바로 가던 중 사고로 다치게 된 경우
- ㉡ 군무원이 소속한 부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상을 입게 되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은 경우
- ㉢ 군인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게 되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하던 중 「군인연금법」등 관련 법률에 의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국가배상청구 외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게 된 경우
- ㉣ 군인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게 되어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一團)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잔여지(殘餘地)의 가격이 증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이익을 그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 ③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다음 사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군 의회 갑은 3자녀 이상 세대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A군 군수 을에게 이송하였다. 을은 이러한 조례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 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있다.
- ② 갑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을은 갑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④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4. 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시안에서 그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② 국가가 어떠한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령과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출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한다.
-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의 개념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시키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의 개념에서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있다.

25. 「공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시(市)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용익할 사법상의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인 사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승려,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구 농어촌도로정비법령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甲을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 ④ 토지수용법령과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를 때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